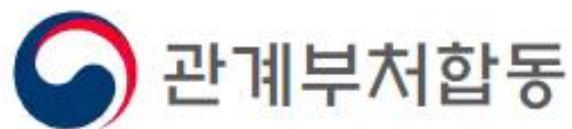

'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2026. 2. 13.



'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요약)

I 추진 배경

- 마약류가 국민 일상에 깊숙이 침투함에 따라,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가 법정 위원회로 출범('23.8월)
 -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5~'29)」을 수립('25.1월)하여 수사·단속부터 치료·재활·예방에 이르기까지 범정부 총력 대응
- ⇒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마약류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II '25년 성과

- 마약류 범죄 엄정대응 기조 下 온라인 수사체계 구축, 국제우편물 2차 검사 시범 도입, 투약이력 의무확인 확대(ADHD치료제, 나비약)
 - 치료·재활·예방 인프라 지속 확충으로 투약사범 치료·재활 참여율 상승('25년 24.0/18.7%), 예방교육 양적 확대(208만명) 등 성과

III '26년 추진과제

- ◇ 국제화·고도화되는 마약범죄 대응역량 강화 + 치료·재활·예방 서비스 내실화로 체감 성과 창출

[전략1]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 불법마약류 접촉 차단

- 마약류 범죄 현장단속 강화 ⇒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현장 투약 등), AI 기반 마약류 집중검사, 국제우편물 2차 검사 확대
- 국제공조체계 강화 ⇒ 주요 마약류 유입국에 검찰수사관 파견, 도피 사범 송환을 위한 국제공조 전담조직 확충, 마약판 코리아데스크 운영
- 마약류 범죄 수사제도 개선 ⇒ 위장수사,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마약류 보상금 지급대상 확대, 사범협조자 형벌감면 제도 입법

- 온라인 유통범죄 신속 차단·수사 ⇒ 마약류 온라인 유통 전담 수사체계 운영, 온라인 마약류 홍보 게시물 신속 차단(서면심의)
-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 개발·활용 ⇒ 전자코 등 복합센서 R&D, AI 기반 CCTV 감시기술, 텔레그램 등 메신저 분석기술 개발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책임성 강화

- 의료용 마약류 관리제도 개선 ⇒ 원료물질 취급자 대상 거래보고 활성화, 의료용 마약류 비급여 처방 시에도 신분확인 권고
- 의료용 마약류 불법처방 점검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데이터 활용한 중복·처방 기관 현장 지도·점검

□ 신종 마약류 선제적 관리

- 신종 마약류 검사·분석 기반 마련 ⇒ 신종 마약류 표준품 확보, 표준품 미확보 물질 탐지 기술개발
- 신종 마약류 신속 대응체계 마련 ⇒ 중독성 관련 정보가 부족한 신종 마약류를 신속히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

[전략2] 마약류 중독자 일상 회복 지원

□ 중독 발견부터 사회복귀까지 전주기적 관리 강화

- 사전발굴 ⇒ 비대면 문자상담, 교정시설·소년보호시설·민간 복지 시설 등 전문가 방문 상담 통해 조기 개입
- 사후관리 ⇒ 투약 경험자에 대한 주기적 사후관리 실시

□ 치료 인프라 개선 및 사회재활 서비스 내실화

- 치료 인프라 개선 ⇒ 한국형 표준진료지침 시범 적용, 적정 보상을 위한 수가 시범사업 검토, 디지털 의료기기 개발 연구
- 사회재활 서비스 내실화 ⇒ 성소수자·군인 등 대상별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 개발, 마약류 예방·재활 인증 전문가 양성

[전략3] 마약류 근절을 위한 예방기반 강화

□ 일반 국민의 마약류 경각심 제고 · 마약류 교육 선진화

- 대국민 장기 캠페인 ⇒ 방송·SNS·OTT·오프라인 등 활용 가능한 모든 매체 활용, 계층별·연령별 맞춤형 홍보 캠페인 실시
- 대상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 교육극·메타버스·VR 등 체험형 콘텐츠 개발, 학생 발달단계를 고려한 교원용 표준지도서 마련
- 의료용 마약류 교육 ⇒ ADHD 치료제·다이어트약 등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현장(주요 학군지역) 맞춤형 홍보

[전략4] 위험 취약 대상에 대한 맞춤형 관리 강화

대 상	주요 내용
청소년	▶미성년자에 대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제한기준 마련(저용량·단기 사용) ▶청소년 맞춤형 재활프로그램(미술·요리·야외활동 등) 운영
수용자	▶썰 교정시설 내 마약탐지장비 도입, 마약 반입 차단 및 수사 실시 ▶첨단장비(신호검출기) 도입을 통한 수용동 내 재활훈련
외국인	▶외국인 유학생 대상 온라인 교육과정 신설 ▶외국인 근로자 입국 직후 건강검진 시 마약류 검사 시행
군 인	▶입영 자원에 대한 마약류 검사 선제 실시 ▶전문강사·교육자료 활용한 군 내 마약류 예방교육·마약류 퇴치주간 운영

IV 향후 계획

-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업 下 차질없이 추진
- 국무조정실은 분기별로 주요 과제별 이행상황 관리
 - 현장의견 지속 수렴, 추진현황 및 보완필요사항 등 마약류대책 협의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공유

목 차

I. 추진배경	1
II. '25년 시행계획의 성과 및 평가	2
III. '26년 시행계획 주요 과제	8
1. 마약류 관련 범죄 엄정 대응	9
2. 마약류 중독자 일상 회복 지원	13
3. 마약류 근절을 위한 예방 기반 강화	15
4. 위험 취약대상 맞춤형 관리강화	17
IV. 향후 계획	19

I. 추진배경

- 마약류가 국민 일상에 깊숙이 침투함에 따라, 국민 안전을 위한 범정부적 총력 대응 필요성 제기
 - 이에, △마약류대책협의회 설치·운영 △마약류 관리 기본·시행계획 수립을 골자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23.8월)
 - * 이하 마약류관리법

- 정부는 마약류관리법 제2조의3에 의거, '제1차('25~'29)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수립('25.1월) 및 "'25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수립('25.3월)

< 제1차('25~'29)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주요 내용 >

- [비전]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국민
- [4대 전략] ① 마약류 범죄 엄정대응 ② 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③ 마약류 근절을 위한 예방기반 강화 ④ 마약류 위험 취약대상 맞춤형 관리(총 185개 세부과제)

- 그간 범정부 거버넌스인 마약류대책협의회 출범, 관계기관 공조강화 (범정부 특별단속, 정보 연계 등) 등 성과

- 그러나, 지능화·국제화하는 초국가범죄로서, 국민이 체감하는 일상 속 마약류 확산 문제는 지속

-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마약류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 (국정과제) 국정74. 국민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

- 실천과제 4. 마약류 중독 차단·재활 및 예방 강화 등을 통한 대응체계 확립

< '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수립 경과 >

- '25년 시행계획 분기별 이행실적 점검 및 추진 독려('25.4·7·9·12월)
- 기관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제출(~'25.11월)
- 국정과제, 현안 대응 필요과제, 전문가 의견 등 반영·보완(~'26.1월)
- 마약류대책협의회를 통해 시행계획 최종 확정('26.2.13)

Ⅱ. '25년 시행계획의 성과 및 평가

- √ 85개 주요과제 중 81개 과제 완료 및 정상 추진, 이행률 95.3%
- √ 범정부 대응 통해 밀반입·온라인사범 검거↑, 재활·교육 인프라 확충 등 성과
- √ 수사·단속 엄정 대응 지속 + 재활·교육·홍보 체감성과 창출 필요

1.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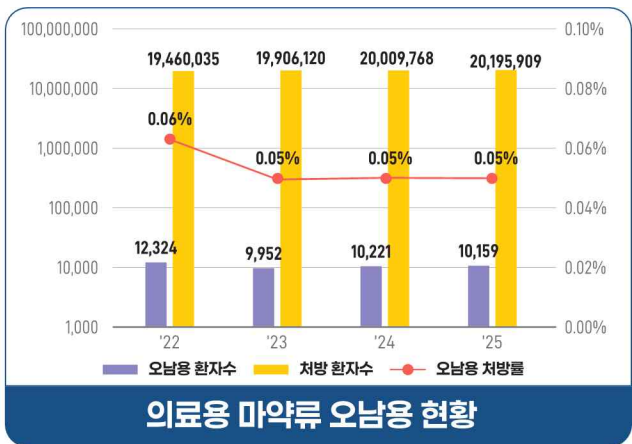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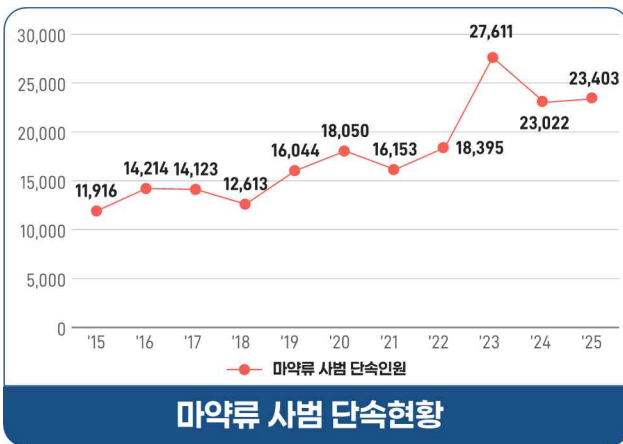
① 추진성과

- 상·하반기 범정부 특별단속 등으로 23,403명 단속, 마약류 2,780kg 압수
 - 특히, 단속기관 공조 강화로 강릉 옥계항 코카인 2t 발견·압수 등 세관·해경 공동 적발 마약 역대 최대(3,318kg, 전년대비 321% 증가)
- 온라인·가상자산 등 지능화된 범죄수법 대응 인프라 확충
 - (온라인) 기존 다크웹 수사팀을 온라인 수사팀으로 개편, 온라인 유통·판매책 등 온라인 마약류 사범 5,341명 검거(경찰, 25% 증가)
 - * 마약류 판매광고 대행업자,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등 마약류 유통 수단까지 확대
 - (가상자산) 전담 분석팀을 최초로 구축(41명), 가상자산 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텔레그램 판매채널 운영조직 검거
- 첨단 기술을 활용한 단속·수사기법 고도화
 - 디지털 증거 삭제·인멸 방지를 위한 휴대용 모바일 포렌식 장비 및 첨단 증거분석 프로그램 도입
 - 약물검사 결과 조작 차단을 위한 소변유효성 검사법 개발
- 국제우편물에 대한 2중 저지선 구축 시범사업 실시
 - 동서울 우편집중국 내 마약류 검색시스템 구축('25.12월)
- 약물운전 제재 근거 마련
 - 의심자에 대한 마약류 검사 근거 및 검사 불응 시 처벌 규정 도입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 인프라 구축

- 환자의 마약류 과거 투약이력 확인 대상 성분 확대
 - * '(24) 펜타닐 → ('25) ADHD 치료제(2분기), 식욕억제제(4분기)
- 의사 셀프처방 금지 성분으로 '프로포폴' 지정('25.2월)
- 「마약청정 대한민국」 내 의료용 마약류 정보센터 개설('25.9월)
- 식약처에 특사경 권한 부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전문 수사('25.3월)

2 평가 및 보완점



□ 지능화 되는 마약류 유통에 대응, 온라인·가상자산 마약류 전담팀 강화·첨단 분석기술 활용 등으로 온라인 마약류 유통 차단

* 온라인 마약류 유통 사범: ('24) 4,274 → ('25) 5,341명

- 현재와 같은 기조를 유지하며, 현장에서 해안가, 컨테이너 등 다양해진 반입경로별로 마약류 밀반입 철저히 차단할 필요

* ▲냉동 컨테이너 이용 중남미궤 코카인 연속 적발 ▲제주동해 해안가 마약류 발견 등

□ '25년 미완료 주요과제 4건 중 3건이 입법 과제(위장수사, 마약류 범죄 이용계좌 지급정지, 마약류 보상범위 확대 등)

※ 나머지 1건은 '대형화물 검색을 위한 컨테이너 검사센터 구축'(~'26.1분기)

- 대국회 설득 등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연내 통과 추진

□ 의료용 오남용에 대한 의료기관 책임성 제고 및 감시인프라 확충 성과

- 다만, ADHD치료제·나비약 등 일부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 인식이 여전히 미흡, 문화적 관점에서 관련 교육·홍보 확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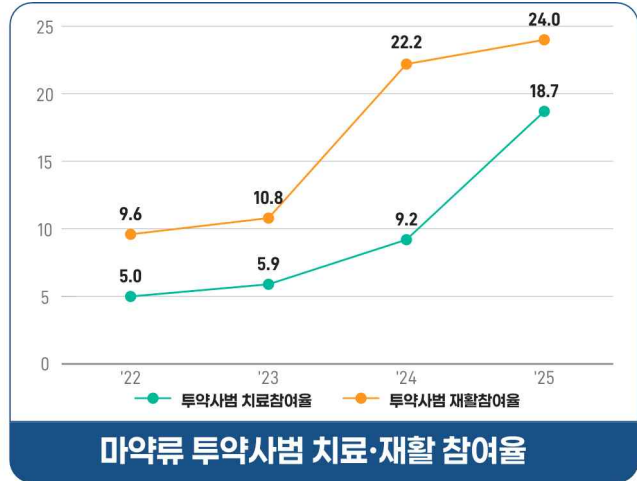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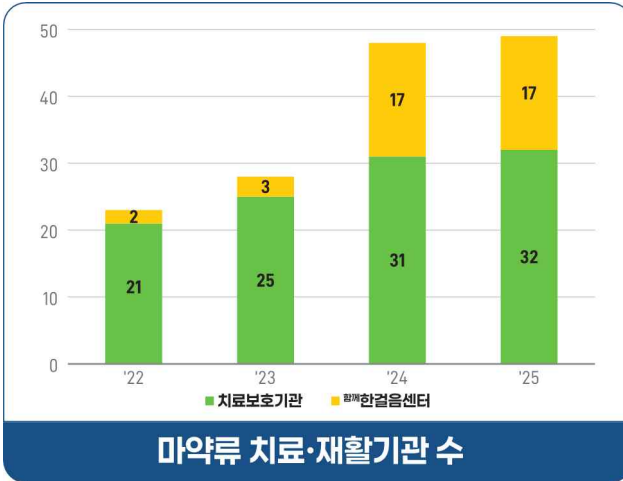
* ADHD 치료제를 복용하면 집중력이 향상된다 57.8%('25년 청소년 마약류 실태조사)

2. 마약류 중독자 일상 회복 지원

1 추진성과

- 중독치료·재활기관에 대한 접근성 제고
 - (상담) 방문상담 6,479명(교정·복지시설 등), 24시간 전화상담 통한 중독상담 및 재활기관 연계 등 9,178건
 - (시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3개소 확대(서울, 경기, 경북)
 - * 함께한걸음센터 ('22) 2개소 → ('24) 17개소 확대
 - (판별) 중독여부를 신속히 판별하기 위해 검사기준 완화('25.2월)
 - (치료-재활 연계) 치료보호 종료 후 본인 동의하 재활기관(한걸음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연계('25.2월 치료보호규정 개정)
- 중독치료·재활 서비스 내실화
 - 마약류 중독자 예방·재활 전문인력* 배출(누적 182명)
 - * '24.9월 제도 도입, 온라인교육필기시험·현장실습(20/80시간) 거쳐 식약처장 인증서 수여
 - 중독재활수용동(마약사범 전담 교정시설)을 운영하여 회복의지가 높은 수형자를 대상으로 전담 재활 서비스 제공 및 집중 관리
 - 사회재활 종료 후 단약여부 등 주기적 관리체계 마련(가이드라인 등)
- 마약류 투약사범 중독관리 강화
 - 함께한걸음센터 인프라 구축, 법무부-식약처-복지부 부처 협업으로 마약류 투약사범 치료·재활 참여율 급증
 - * (치료참여율) ('23) 5.9% → ('25) 18.7%, (재활참여율) ('23) 10.8% → ('25) 24.0%
 - (기소유예) 교육·선도조건 967명, 사범-치료-재활 연계조건 192명
 - (집행유예)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및 재활 교육 3,588명
 - (실형) 수감자 대상 재활교육 1,453명 실시 및 재활의지가 높은 수감자 대상 회복이음과정* 138명 실시
 - * 재활의지 높은 수감자 대상으로 전담교정시설에서 행동치료 등 전문재활 실시
 - (출소자) ▲ 본인 동의하 치료보호기관 연계(26건), ▲ 거주지 내 한걸음센터 연계(전화상담 253건, 사례관리 서비스 128건)

2 평가 및 보완점



- 치료기관 확충, 인력 양성,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 도입, 관계기관 협업체계 마련 등 치료·재활 확대 기반 마련
 - 기소유예·수감·출소 후 등 여러 사범 단계에서 중증 중독자가 전문기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치료보호 연계율 높일 필요
 - 정량적 지표 상향과 함께 실제 치료·재활에 성공하는 사례를 축적, 마약사범·중독자들의 사회복귀 의지 자극
 - 치료·재활 전문 인력 지속 양성하여 더 많은 마약류 중독자가 양질의 치료·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필요

3. 마약류 근절을 위한 예방기반 강화

1 추진성과

- 대국민 홍보·예방교육 양적확대* 및 질적심화** 지속
 - * 마약류 예방교육(인원·횟수): ('24) 228만명·3.2만회 → ('25) 229만명·3.9만회
 - * 마약류 예방교육 효과성 평가지수: ('24) 87점 → ('25) 89점(최종목표 90점의 98.8% 달성)
 - (대국민) 서울역·2호선 등 옥외광고 실시, 의료용마약류(ADHD 치료제) 전단지 배포, 인플루언서·트렌드 반영 디지털 홍보
 - (청소년) ▲마약류 예방교육 176만명 실시('24년 162만명) ▲중등학교 마약류 예방교육을 위한 교사용 지도서 개발·배포('25.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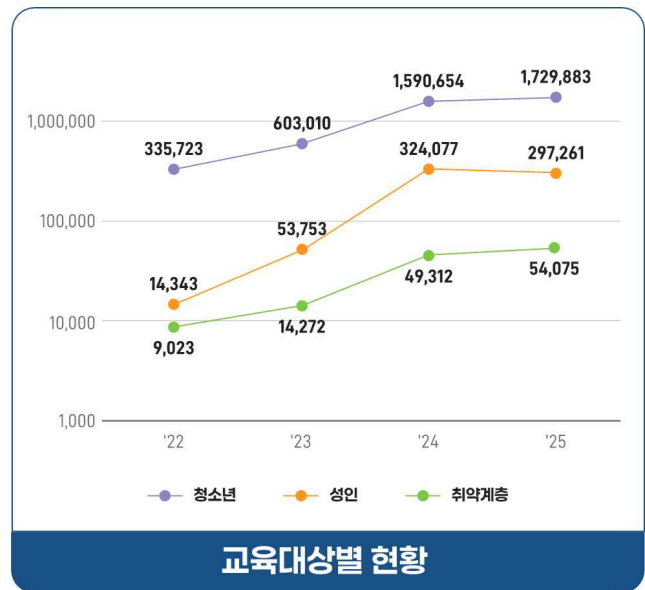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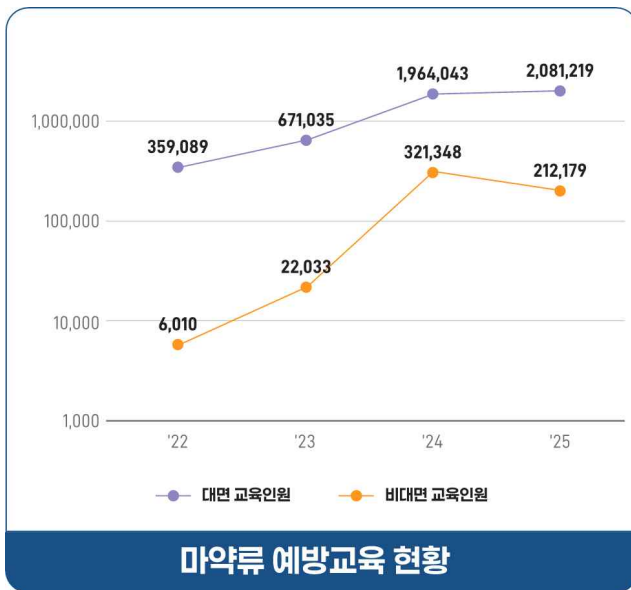
- (대학생) 마약 예방 B.B.서포터즈(Be Brave, 마약! 거절할 용기) 운영, 20개 대학에서 캠페인 221건, 디지털 홍보 331건 등 실시

□ 데이터·현장 중심 대책을 위한 기반 강화

- 마약류 불법사용·유통을 사전에 예측·차단하기 위한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25.12월)
- 마약류 하수역학 조사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국 하수종말 처리장(34개) 외 일부 지역은 추가 정밀조사 실시('25.12월)
- 검출빈도가 높은 암페타민 계열*에 대해 저비용·고효율로 검출할 수 있는 신속 검사키트 개발('25.12월)

*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메스암페타민, MDMA(각각 하수역학조사 검출량 1, 2, 4위)

2 평가 및 보완점



- 예방교육이 양적으로는 확대되었으나, 마약류 인식 개선에 있어서는 다소 미흡한 측면 존재

* ADHD 치료제를 복용하면 집중력이 향상된다 57.8%(‘25년 청소년 마약류 실태조사)

- 특정 마약류(ADHD치료제 등)에 대한 테마별 홍보, VR·보드게임·미술 교육 등 다양한 참여형 교육 등 통해 교육 효과성 제고*

- 예방교육 확산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튜브·OTT·언론보도 등을 통해 마약류에 대한 호기심을 높이는 콘텐츠 지속 생산

* 영화·드라마 등 콘텐츠 통해 위험성 낮게 인식하는 문제(청소년정책연구, 2025)

4. 위험 취약요인별 맞춤형 관리 강화

1 추진성과

- (합성마약) 국제기구 등과 정보협력, 식품 중 혼입된 마약류 200여종 동시분석 기술 개발, 신종마약 조기경보 발령(2회) 등 실시
- (청년) 학교밖 청소년 등 청소년에 대한 마약류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 중독자 조기 발굴 및 상담·재활 서비스 제공 확대

* 학교밖청소년 등 고위험군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28,376명(1,470건) 실시

-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마약류 예방교육 의무화
- ▲ 대학생 마약류 예방교육 가이드라인 배포
- ▲ 청소년용 마약예방교육 VR 콘텐츠 개발
- ▲ 전국 복지시설·소년원 등 '찾아가는 마약류 예방·중독 상담' 2,977건
- ▲ 청소년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 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69명
-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협력해 고위험군 선제 발굴 41명

- (외국인) 외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입국금지기간 상향 및 사증심사 필수 제출서류에 대한 위변조 검증 강화 등 실시
 - 외국인 유학생 대상 조기적응 프로그램 내 범죄예방 교육을 신설하고, 다국어 안내자료 제작·배포(예방교육 9,426명 수강)

- (수용자) 교정시설 내 모든 수용자 대상으로 물질중독 예방교육 실시 (기존 비투약 마약사범 및 소년수형자, 알코올중독 수형자 등 일부 수용자)
- (군장병) 병역·입영판정 대상자 13.9만명, 임관·장기복무지원 간부 3.6만명 마약류 검사 실시 → 양성자는 수사기관 통보 및 임관 거부

2 평가 및 보완점

- 시스템 연계, 기술개발 등 그간 추진실적을 토대로 합성마약 조기차단 성과 창출 + 표준품 선제확보 확대할 필요(100여종→확대)
- 외국인·일반수형자·군장병 등 맞춤형 교육 양적 확대를 지속하는 한편, 교육만족도, 10~20대 투약사범 수 등 정량적 성과관리 검토

Ⅲ. 2026년 시행계획 주요 과제

4대 전략, 90개 주요 과제 추진



전략 1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 '25년 >> ● 범정부 특별단속 ● 고도화되는 범죄수법 대응체계 구축
● 국제우편물 마약류 2중 저지선 시범사업 등 수사·단속 기반 마련

→ 국제범죄·의료용 마약류

- 1 다양해진 반입경로별로 마약류 밀반입 차단
- 2 유흥가 등 취약지역 중심 범정부 특별단속
- 3 초국가 마약범죄 국제 대응
- 4 AI 기반 마약류 수사기법 고도화 및 미완료 입법과제* 연내 통과
* 위장수사, 마약류 이용계좌 지급정지
- 5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 책임성 강화 등 37개 과제



전략 2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 '25년 >> ● 중독 치료·재활 기관 확충 및 맞춤형 프로그램 도입
● 마약류 투약사범 중독관리 강화 등 치료·재활 확대 기반 마련

→ 서비스 확대

- 1 함께 한걸음센터 전문가 방문상담 2 비대면 문자상담 서비스 제공
- 3 기소유예·수감·출소 등 여러 사법 단계에서 중증 중독자가 전문기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치료보호 연계율 제고
- 4 마약류 사범 사회재활 연계 강화 등 16개 과제



전략 3
예방기반
강화

- '25년 >> ● 예방교육 양적 확대
● 교육 참여도 및 실효성 제고 필요

→ 콘텐츠 다양화

- 1 방송·SNS·OTT 등 홍보 매체 다각화 2 학생 발달 단계를 고려한 표준지도서 개발
- 3 학교장, 학부모, 유학생 등 대상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16개 과제



전략 4
위험 취약대상
맞춤형
관리 강화

- '25년 >> ● 합성마약 조기차단 성과
● 외국인·수형자·군장병 교육 확대

→ 양적 확대 지속

- 1 청소년 대상 맞춤형 사회재활프로그램 개발·보급
- 2 입영·현역 군인 대상 마약류 검사 등 질적 관리 실시 등 21개 과제

1. 마약류 관련 범죄 엄정 대응

< 2026년 목표 >

√ 마약류 공급 사범 : ('25) 6,777명 → ('26) 7,455명

√ 의료용 마약류 공급 대비 오남용 처방률 : ('25) 0.05% → ('26) 0.045%

* 2천만명 처방 기준 오남용 환자 약 1,000명 감축 목표

① 불법 마약류 접촉 차단^{25개}

□ 마약류 범죄 현장단속 강화

- **합동** 공·항만, 유흥시설, 불법체류 외국인 밀집지역 등 마약류 유입 취약지역에 대한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실시(기본과제 1-1-1)
* 대검찰청, 경찰청, 법무부,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 **관세** 특송물품 목록통관과 국제우편물에 대한 AI 기반 우범 선별모델을 활용한 마약류 집중 검사(3월~)(1-1-15)
- **관세** 우범국 출발·경유 선박·화물 정밀검사 실시(1-1-17)
 - **관세** 대형 컨테이너 화물에 은닉된 마약류 적발이 용이한 혼합방식* 검색장비(고정형 양방향 + 후방산란) 도입(2월, 부산신항)(1-1-21)
* 투과+반사 방식, 마약 등 유기물 적발 강점
 - **관세** 전국 주요 공항만 마약 특별검사팀* 편성·운영(2월~)(신규)
* 전국 4개 세관 5개팀 구성, 우범화물 분석·합동검사 기능을 마약단속에 집중
- **관세-우본** 국제우편물 통한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해 우편집중국 내 2차 검색 시범사업 확대(1-1-22) 및 전용 세관검사장 구축(1-1-23)
- **관세** 전국 주요 공항에 마약 전담검사대* 설치·운영(시범운영 ~6.30)(신규)
* 통관검사 담당직원과 마약수사 요원이 합동 검사

□ 온라인 유통범죄 신속 차단·수사

- **검경** 마약류 온라인 유통 차단을 위해, 전담 수사체제 운영 및 해외 메신저 서비스 기업들과 협력체계 구축·강화(1-1-7)

- **방미통위** 방미심위 서면심의 대상을 기존 디지털성범죄물에서 마약류 정보까지 확대, 마약 거래·광고 등 불법정보 심의기간 단축(1-1-10)

□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 개발·활용

- 시료 조작·투약 여부를 신속 판별할 수 있는 **대검** 소변 유효성 검사법, **경찰** 간이검사 패치 등 연구·개발(1-1-4)
- **대검** AI 기반 CCTV 영상 감시기술 개발 연구(1-1-12)
 - * AI가 CCTV 영상을 자동분석, 마약류 사범의 특징을 가진 사람 발견 시 경보
- **경찰·관세** 전자코 등 복합센서 활용한 마약류 탐지 기술 R&D 실시(신규)
- **경찰** AI 기반 텔레그램 등 메신저 분석시스템 개발(신규)

□ 마약류 범죄 수사제도 개선

- **대검** 범죄조직 내부정보 진술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마약류 보상금 지급대상 확대* (마약류관리법 개정)(1-1-5) 및 사범협조자 형벌 감면 제도 도입(마약류불법거래방지특례법 개정)(1-1-6)
 - * 범죄 발각 전후를 불문하고 마약류 사범을 검거하거나 검거 협조한 사람에게 보상금 지급 가능
- **대검·경찰·식약** 수사기관이 위장신분으로 범죄 관련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위장수사 제도 마련(마약류관리법 개정)(1-1-8)
- **대검**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정지* 제도 도입(마약류불법거래방지특례법 개정)(1-1-14)
 - * 수사기관이 마약류 범죄자금 입금계좌에 대해 금융회사에 출금정지 요청, 금융회사는 출금정지

□ 효과적 수사·단속을 위한 기관 간 정보 공유

- **관세·대검** 마약류 사범 정보를 공유·합동분석, 의심자 수하물 우선 검사 등 밀수입 단속에 활용
 - 마약류 사범 정보 공유 대상 확대(관세법 시행령 개정)(1-1-25)
 - * (기존) 마약류 밀수유통 사범 → (개선) 마약류 밀수유통·투약·소지·밀조 + 군사법원 기소되어 유죄판결된 마약류 사범 +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자

□ 마약류 범죄 수사를 위한 국제공조체계 강화

- **대검** 주요 마약류 유입국에 검찰수사관을 파견, 도피사범 검거 등 원점 타격형 국제 공조 시스템 구축(3개국 → 5개국)(1-1-26)
- 우리나라가 주관하는 국제회의체 규모·역할 강화
 - **대검**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개최 시 유럽지역 국제기구 및 주요 EU 국가 초청(현재 아시아·미주국가 중심)(1-1-27)
 - **경찰** 아시아 마약범죄 대응 실무협의체(ANCRA) 운영하여 아태지역 마약 밀수조직 단속 공조, 첨단수사 기술 의제 등 논의(1-1-29)
- **경찰** 다국적 마약 밀수조직 해체를 위한 인터폴 합동 공조작전 (MAYAG 프로젝트) 연장('23~'26년 → 3년 연장)(1-1-31)
- **해경** 한-콜롬비아 해군간 협력약정서 관련, 해상 마약범죄 소탕 작전인 '오리온 캠페인' 합동 훈련 참여(1-1-31)
- **관세** 기존 5개국(태국·베트남·말련·미국·네덜란드)에 더해 프랑스·캐나다·독일·캄보디아·라오스 등 총 10개국*과 합동단속 작전 실시 (일명 "마약판 코리아데스크" 구축)(신규)
* 우리나라 국경단계 마약적발 중 건수기준 67%, 중량기준 79% 차지('25년 기준)

②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책임성 강화^{6개}

- **식약** 원료물질 취급자(제조업자·수출입업자) 대상 거래보고 시스템 사용을 **활성화*** 및 **관리 강화**(1-2-3)
* 원료물질 수출입 승인 처리 시 거래보고 시스템 사용 안내
- **식약**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빅데이터를 활용, 중복·과다처방기관을 선별해 수사기관 협업 통해 현장 지도·점검(1-2-4)
- **식약**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을 확인하는 성분을 단계적으로 확대(1-2-5)
* ('24) 펜타닐 → ('25) ADHD 치료제, 식욕억제제 → ('26) 졸피뎀

- **식약**의료용 마약류는 **비급여 처방시에도 신분확인 권고**(하반기, 현재는 급여 처방시에만 신분 확인)(1-2-6)
- **농식품** 전국 임상수의사 대상 연수교육에 '동물용 마약류 안전사용 교육'을 필수 교과로 지정(1-2-8)
- **식약**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회수경로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시범사업 등 실시(신규)

3 신종 마약류 선제적 관리^{4개}

- **국과수** 신종 마약류 등 표준물질 확보 통한 검사 인프라 구축(1-3-1)
 - * 신종 마약류 60종 포함 마약류 표준품 110종 확보
- **국과수·식약** AI 기반 표준품 미확보 물질 탐지기술 개발(신종 마약류 탐색용, 식품 중 마약류 추적용 플랫폼 등)(1-3-3)
- **식약**마약류 사용행태를 확인하기 위한 **하수역학 조사 실시**(1-3-8)
 - * (기존) 34개 하수처리장 조사 → ('26) 17개씩 2년간 번갈아가면서 조사
- **식약**중독성 관련 정보가 부족한 신종 마약류를 신속히 임시 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절차 개선(1-3-9)

4 마약류 연계 · 유사 범죄 대응^{2개}

- **대검**마약류 사용 상태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상해, 폭행 등) **가중처벌** 조항 마련(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1-4-1)
- **투약 의심 운전 · 운항자 검사 및 단속 강화**(1-4-2)
 - **경찰**약물운전 처벌 · 단속 규정 마련('25.3월), 적극 단속 · 검거
 - **해경**약물운항에 대한 처벌 · 단속 근거 마련(해상교통안전법 등 개정)

2. 마약류 중독자 일상 회복 지원

< 2026년 목표 >

√ 사회재활 제도 이용자 수 :

- 사법-치료-재활 연계*: ('25) 192명 → ('26) 200명

*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제안 인원 수

- 수용자 회복이음과정: ('25) 138명 → ('26) 180명

√ 총 사회재활서비스* 제공 건수 : ('25) 45,390건 → ('26) 46,700건

* 함께한걸음센터에서 제공한 총 사회재활 서비스 건수

① 중독 발견부터 사회복귀까지 전주기적 관리 강화^{4개}

- **식약·복지** 전문가(상담사,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교정시설, 소년보호시설, 민간 복지시설 등에 방문상담 및 관리대상 조기 발굴(2-1-1/2-3-4/4-1-8)
- **식약** 젊은 세대에 맞춰 기존의 24시간 전화 상담센터(1342)에 추가적으로 비대면 문자 상담 서비스 진행(2-1-3)
- **복지** 마약류 중독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 치료보호 기관 확대 필요성, 내실화 방안 등 검토(2-1-6)
* 현재 32개 권역별 의료기관 운영 중
- **식약** 투약 경험자에 대한 주기적 사후관리 실시(6개월~최대3년, '25년 매뉴얼 마련 → '26년 현장 적용)(2-1-8)

② 치료 인프라 개선^{5개}

- **복지** 중독 수준별·약물별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25년)한 '한국형 표준진료지침' 시범 적용, 보완(2-2-1)
- **복지** 디지털 의료기기를 활용한 마약류 사용장애 대체 치료법 개발 R&D 지속 진행(확증임상시험)(2-2-2)
- **복지** 마약류 중독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치료기관 입원 지원을 위해 정신의료기관 응급병상정보 공유시스템 고도화(2-2-4)
- **복지** 치료 난도가 높은 마약류 중독치료의 적정수준 보상을 위한 수가 시범사업 검토(2-2-5)

- 복지치료 난이도가 높은 마약류 중독치료 전문인력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발, 시범운영(2-2-6)

3 사회재활 서비스 내실화^{4개}

- 식약 성소수자·군인 등 대상별 마약류 중독 재활프로그램 및 마약 대체 일반약 중독 재활프로그램 개발(2-3-2)
 - * ('25) 외국인 중독자 → ('26) 성소수자, 군인, 일반약 중독 등
- 식약·복지 중독자 가족 회복을 위한 가족프로그램 지원(2-3-3)
 - * 마약류 중독 및 재발·회복과정 이해, 대처방법 훈련, 가족 심리 상담 등
- 식약 마약류 예방·재활 인증 전문가 양성 확대(2-3-5/2-3-6/3-2-16)
 - * '24년 도입, '25년 182명(누적) 배출 → 지속 확대
- 식약·노동 치료 결과가 우수한 마약류 중독·투약자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연계 추진(2-3-7/2-4-8)

4 마약류 사범의 사회 내 중독 관리^{3개}

- 대검·식약·법무(기소유예) 사범-치료-재활 연계모델 확대를 위해 치료·재활 권역별 협의체 운영(2-4-2)
 - * ('23, 시범사업) 22명 → ('24) 143명 → ('25) 192명
- 법무(집행유예 등)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수시·불시 약물 검사 실시*, 중독증세가 심한 대상자는 전문가 심리상담 연계(2-4-3)
 - * ('24) 11,896건 → ('25) 18,158건
- 법무 마약류 사범 보호관찰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호관찰관 대상 중독심리사 등 전문자격증 취득 확대
 - * ('23) 44명 → ('24) 37명 → ('25) 39명(누적 120명)
- 법무(실형·출소자) 중독재활수용동에 수용된 마약류 사범 사례관리 및 출소 후 사회재활기관 연계 실시(전주기적 관리)(2-4-4/2-4-5)
 - * 한걸음센터 연계 대상을 회복이음과정 참여자 + 중독재활수용동 대상자로 확대

3. 마약류 근절을 위한 예방 기반 강화

< 2026년 목표 >

√ 대국민 예방교육 실적 : ('25) 229만명 → ('26) 230만명

√ 마약류 예방교육 효과성 평가지수 : ('25) 89점 → ('26) 89점*

* 첫 시행연도부터 중장기 목표('29년, 90점)를 근접 달성하여 2차년도에는 효과성 점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확인 필요, '26년까지 효과성 평가 진행 후 목표 상향 예정

1 일반 국민의 마약류 경각심 제고^{3개}

○ 식약-문체 대국민 장기 캠페인 추진 (3-1-1)

- '26년 신규 마약근절 인식개선 광고 기획 및 제작 송출
- 방송-SNS-OTT-오프라인을 아울러 마약류 위험성을 계층별, 연령대별 맞춤형으로 전달할 수 있는 홍보 캠페인 실시

○ 식약 마약류 예방·퇴치 주간 운영 (3-1-2)

- 세계 마약퇴치의 날(6.29) 전후로 마약류 예방·퇴치 주간을 운영하여 대국민 대상 마약류 오남용 예방정책 등 집중 홍보

○ 식약 홍보대상별 주요 활동공간에 체험형 홍보공간 운영 (3-1-5)

* 키자니아(5~11세), 잡월드(12~19세), 도핑예방 홍보관(체육특기생), 지역축제(가족) 등

2 마약류 교육 선진화^{8개}

○ 식약 학교장, 학부모 등 대상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극·메타버스·VR 등 체험형 콘텐츠 확대 (3-2-1/3-2-12)

* ('25) 성인·여행객·군인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 콘텐츠 제작 → ('26) 학교장, 학부모, 유학생, 외국인, 구직자 등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 교육 학생 발달단계를 고려, 위험성, 범죄연루 방지, 도움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학년군별 교원용 표준지도서 마련 (3-2-2)

* ('25) 중.고교교용 → ('26) 유치원 및 초등학교교용

- **교육** 초중등학교 교직원 대상 원격연수과정 상시 운영 및 대면 연수 과정 개설·운영(방학기간 내 집중 운영) 등 **교원 역량 강화**(3-2-4)
- **식약** 가정에서도 마약류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마약청정 대한민국’ 내 교육·홍보자료 **최신화**(3-2-5)
- **식약·성평등** 학교밖청소년 등 고위험군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교육 실시(3-2-7/4-1-12)
 - * 학교밖청소년 등 고위험군 청소년 대상 교육 지원(2.8만명) 및 교육콘텐츠 등 개발
- **식약·외교** 해외 출국자 대상 로밍 안전문자 발송시 **여행객 마약류 예방 콘텐츠 링크 포함**(3-2-13)
- **식약** 마취제·진통제·항불안제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3-2-14)
 - * (‘25) 메틸페니데이트, 펜터민, 프로포폴, 졸피뎀, 펜타닐 등 5종 → (‘26) 9종(누적)
- **식약** 마약류 예방 서포터즈 운영 및 홍보대사 **위촉**(3-1-6/3-2-9)

3 정책 기반 및 거버넌스 공고화^{5개}

- **식약** 마약류 인식 실태조사 실시, 예방교육 등 관련 정책에 반영 (3-3-3)
- **국조·식약** 부처 참석 확대 등 **마대협 총괄조정 기능 강화**(3-4-1)
- **식약** 마약류 근절을 위한 **지자체 표준 조례 제·개정안 마련**(3-4-3)
- **식약·대검** 마약류 공동 대응을 위해 **주요 협력국 및 국제기관과 업무 협약(MOU) 체결 등 협력방안 모색**(3-4-7/8/9)
- 마약류 대응 **맞춤형 ODA 지속 추진**(3-4-10)
 - **대검** 주요 마약류 제조지역인 **메콩지역의 마약통제 역량강화 사업** (‘25.3~’27.2), **경찰** 몽골 경찰 마약수사 역량강화 사업(‘23~’27) 등

4. 위험 취약대상 맞춤형 관리 강화

< 2026년 목표 >

- √ 1~20대 마약류 사범 치료보호 참여율 : ('25) 7.1% → ('26) 7.5%
- √ 대상별 맞춤형 교육 수혜 대상 확대 :
 - 학교밖청소년·이주노동자 등 취약계층: ('25) 54,075명 → ('26) 120,000명
 - 군인: ('25) 101,179명 → ('26) 110,000명

1 청소년^{6개}

- **식약** 미성년자에 대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제한기준 마련(저용량 단기간 사용 등)(4-1-2)
- **성평등** 청소년유해매체점검단 운영, 마약류 등 불법·유해정보 상시 모니터링 및 유해정보 차단, 수사 연계(4-1-3/4-1-4)
- **식약** 청소년 대상 맞춤형 사회재활프로그램 개발·보급(4-1-7)
 - * ('25) 여성 청소년(개발) → ('26) 여성 청소년(보급), 학교밖 청소년(개발)
- **식약·성평등** 치료·재활(한걸음센터)을 마친 청소년을 상담복지센터로 연계 하여, 우울·불안 등에 대한 상담 심리 지원(4-1-9)
- **식약** 교육극, 보드게임, VR 등 예방교육 몰입도 및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청소년 대상 참여형·체험형 교육 콘텐츠 개발(4-1-10)
 - * ('25) 마약 예방 VR·컬링 등 개발 → ('26) 마약 예방 젠가 등 신규 교구 개발
- **식약** ADHD 치료제 남용 집중단속 및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신규)

2 교정시설^{6개}

- **법무** 수교정시설 내 마약탐지장비 도입, 마약 반입 차단 및 수사·불시 검사 실시(4-2-2/4-2-3)
- **법무·식약** 수용자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해 투약여부 법무·식약 교차 점검체계 구축(4-2-5/4-2-6)
 - * (법무) 교정의료정보시스템, - (식약)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 **법무** 모든 마약류 사범 대상 '자기주도 재활훈련 프로그램' 도입(4-2-7)
 - * ('25) 개발 및 시범운영 → ('26) 전국 확대

- **법무** 외국인 마약류 사범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운영(4-2-8)
 - * ('25) 예방교육 대상을 쉰 수형자로 확대 → ('26) 외국인 맞춤형 교육 추진
- **법무** 재범예방 교육 이수명령 병과 대상 확대(마약류관리법 개정)(4-2-9)
 - * (현행)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사범 → (개선) 판매·제조·유통·소지 범죄자까지 확대
- **법무** 첨단장비(뉴로 바이오 신호검출기) 도입을 통한 수용동 내 재활 훈련 실시(신규)
 - * 뇌파 관련 측정 및 훈련기 도입, 측정·훈련기 관련 담당자 지정·교육

3 외국인^{4개}

- **법무** 입국 전 사증심사 시 서류 위변조 검증 강화 지속(4-3-1)
- **법무** 외국인 유학생 대상 온라인 교육과정 신설(4-3-5)
 - * 유학생 출신국 언어(18개 언어)로 조기적응프로그램을 동영상 방식으로 제작
- **교육** 외국인 유학생 대상 다국어 홍보자료 각 대학 배포·안내(4-3-6)
 - * 국내법령·처벌조항 등 외국인 대상 18개 국어 안내자료(식약처 개발) 활용
- **노동** 외국인 근로자 입국 직후 취업교육기관 건강검진 시 마약류 검사 실시(4-3-8)

4 군^{5개}

- **병무** 입영·현역 군인 대상 마약류 검사 실시, 조기 발견(4-4-1/2/3/4)
 - * 병역판정검사(약 350명 선별), 입영판정검사(약 18만명 전수), 간부 임관(약 3만명 전수)
- **국방** 마약류 이력 장병은 도움·배려 장병으로 선정, 주기적 상담 시행 등 사후 관리(4-4-6)
- **국방** 병영 내 마약류 범죄에 대한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약류 특별신고 기간 운영, 신고자 보상금 지급(4-4-8)
- **국방** 마약류 반입물품 검사 및 탐지 강화(4-4-9)
- **국방** 전문강사·교육자료 활용한 군 내 마약류 예방교육 실시하고, 군 마약류 퇴치 홍보 주간* 운영(4-4-10) * 마약퇴치의 날(6.26) 연계

V. 향후 계획

□ 과제 점검·관리

-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업 下 차질 없이 추진
- 총리실은 주요 과제별 이행상황을 책임 있게 관리
 - 주요 과제에 대해서는 투입(input) 뿐만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분기별 성과 점검·발표
 - 지연 과제는 자연사유 분석 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보완방안 마련

□ 현안 대응

- 마약류 관련 사회적 이슈 발생 시, 주관부처 중심으로 신속 대응
- 범정부적 대응 필요시,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통해 협의·조정

□ 신규 과제 발굴·개선

- 현장 의견을 지속 수렴, 추진 현황 및 보완 필요사항 등의 현장 의견을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공유
- 해외사례 분석, 전문가 의견 수렴 등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마련해 '27년도 시행계획에 반영

붙임 1 시행계획 주요 과제별 일정표

과제명 (90개)	추진 일정				소관 부처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 기본계획 189개 과제					
[전략1] 마약류 관련 범죄 엄정 대응 ^{37개}					
1. 불법 마약류 접촉 차단 ^{25개}					
1) 공항만, 유흥시설, 불법체류 외국인 밀집지역 등 마약류 유입 취약지역에 대한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실시					정부 합동
2) AI 기반 우범 선별모델을 활용한 마약류 집중 검사					관세
3) 우범국 출발·경유 선박·화물 정밀검사 실시					관세
4) 대형 컨테이너 화물 은닉 마약류 혼합방식 검색장비 도입					관세
5) 전국 주요 공항만 마약 특별검사팀 편성·운영					관세
6) 우편집중국 내 2차 검색 시범사업 확대					관세·우본
7) 전용 세관검사장 구축					관세·우본
8) 전국 주요 공항에 마약 전담검사대 설치·운영					관세
9) 마약류 온라인 유통 차단 전담 수사체제 운영 및 해외 메신저 서비스 기업들과 협력체계 구축·강화					대검·경찰
10) 서면심의 대상 확대 및 불법정보 심의기간 단축					방미통위
11) 소변 유효성 검사법, 간이검사 패치 등 연구·개발					대검·경찰
12) AI 기반 CCTV 영상 감시기술 개발 연구					대검
13) 전자코 등 마약류 탐지 기술 R&D 실시					경찰·관세
14) AI 기반 텔레그램 등 메신저 분석시스템 개발					경찰
15) 마약류 보상금 지급대상 확대					대검
16) 사법협조사 형벌 감면 제도 도입					대검
17) 위장수사 제도 마련					대검·경찰·식약
18)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정지 제도 도입					대검
19) 마약류 사범 정보 합동분석 및 공유 대상 확대					관세·대검
20) 원점 타격형 국제 공조 시스템 구축					대검
21)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초청 국가 확대					대검
22) '국제 마약수사 컨퍼런스(ICON)' 개최 시 아태지역 마약 밀수조직 단속 공조, 첨단수사 기술 의제 등 논의					경찰

과제명 (90개)	* 기본계획 189개 과제				소관 부처
	추진 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23) 인터폴 합동 공조작전(MAYAG 프로젝트) 연장					경찰
24) '오리온 캠페인' 합동 훈련 참여					해경
25) 10개국과 합동단속 실시, '마약판 코리아데스크' 구축					관세

2.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책임성 강화^{6개}

1) 원료물질 취급자 거래보고 시스템 사용 활성화					식약
2) 빅데이터 활용 중복·과다처방 기관 선별					식약
3) 과거 투약이력 확인 성분 단계적 확대					식약
4) 의료용 마약류 비급여 처방 시 신분확인 실시					식약
5) '동물용 마약류 안전사용 교육' 필수 교과로 지정					농식품
6)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회수경로 기반 마련					식약

3. 신종 마약류 선제적 관리^{4개}

1) 신종 마약류 등 표준물질 확보 통한 검사 인프라 구축					국과수
2) AI 기반 표준품 미확보 물질 탐지기술 개발					국과수·식약
3) 마약류 사용행태 확인 위한 하수역학 조사 실시					식약
4) 임시 마약류 지정 절차 개선					식약

4. 마약류 연계·유사 범죄 대응^{2개}

1) 마약류 사용 강력범죄 가중처벌 조항 마련					대검
2) 투약 의심 운전·운항자 검사 및 단속 강화					경찰·해경

[전략2] 마약류 중독자 일상 회복 지원^{16개}

1. 중독 발견부터 사회복귀까지 전주기적 관리 강화^{4개}

1) 전문가 방문상담 및 관리대상 조기 발굴					식약·복지
2) 24시간 전화 상담센터(1342)에 문자 상담 서비스 추가					식약
3) 권역별 치료보호기관 확대 필요성, 내실화 방안 등 검토					복지
4) 투약 경험자에 대한 주기적 사후관리 실시					식약

과제명 (90개)	* 기본계획 189개 과제	추진 일정				소관 부처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 치료 인프라 개선^{5개}						
1) '한국형 표준진료지침' 시범 적용, 보완						복지
2) 마약류 사용장애 대체 치료법 개발 R&D 지속 진행						복지
3) 정신의료기관 응급병상정보 공유시스템 고도화						복지
4) 마약류 중독치료 적정 보상을 위한 수가 시범사업 검토						복지
5) 마약류 중독치료 전문인력 교육과정 개발 및 시범운영						복지
3. 사회재활 서비스 내실화^{4개}						
1) 대상별 마약류 중독 재활프로그램 및 마약 대체 일반약 중독 재활프로그램 개발						식약
2) 중독자 가족 회복을 위한 가족프로그램 지원						식약·복지
3) 마약류 예방·재활 인증 전문가 양성 확대						식약
4) 치료 결과 우수자 대상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연계 확대						식약·노동
4. 마약류 사범의 사회 내 중독관리^{3개}						
1) 사범-치료-재활 연계모델 확대 위한 권역별 협의체 운영						대검·식약·법무
2)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 약물검사 및 전문가 심리상담 연계						법무
3) 중독재활수용동에 수용된 마약류 사범 전주기적 관리						법무
[전략3] 마약류 근절을 위한 예방 기반 강화^{16개}						
1. 일반 국민의 마약류 경각심 제고^{3개}						
1) 대국민 장기 캠페인 추진						식약·문체
2) 마약류 예방·퇴치 주간 운영						식약
3) 홍보대상별 주요 활동공간에 체험형 홍보공간 운영						식약
2. 마약류 교육 선진화^{8개}						
1) 대상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체험형 콘텐츠 대폭 추가						식약

과제명 (90개)	* 기본계획 189개 과제				소관 부처
	추진 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2) 학년군별 교원용 표준지도서 마련					교육
3) 마약류 대응 관련 초등학교 교원 역량 강화					교육
4) '마약청정 대한민국' 내 교육·홍보자료 최신화					식약
5) 학교밖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교육 실시					식약·성평등
6) 로밍 안전문자 발송시 마약류 예방 콘텐츠 링크 포함					식약·외교
7) 오남용 우려 의료용 마약류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식약
8) 마약류 예방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및 홍보대사 위촉					식약

3. 정책 기반 및 거버넌스 공고화^{5개}

1) 마약류 인식 실태조사 실시 및 관련 정책 반영					식약
2) 부처 참석 확대 등 마대협 총괄조정 기능 강화					국조·식약
3) 마약류 근절을 위한 지자체 표준 조례 제·개정안 마련					식약
4) 주요 협력국 및 국제기관과 마약류 대응 협력방안 모색					식약·대검
5) 마약류 대응 맞춤형 ODA 지속 추진					대검·경찰

[전략4] 위험 취약대상 맞춤형 관리 강화^{21개}

1. 청년^{6개}

1) 미성년자에 대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제한기준 마련					식약
2) 마약류 등 불법·유해정보 모니터링 및 수사 연계					성평등
3) 청소년 대상 맞춤형 사회재활프로그램 개발·보급					식약
4) 치료·재활 종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로 연계					식약·성평등
5) 청소년 대상 참여형·체험형 교육 콘텐츠 개발					식약
6) ADHD 치료제 남용 집중단속 및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식약

2. 교정시설^{6개}

1) 소교정시설 내 마약탐지장비 도입 및 수시·불시 검사					법무
2) 수용자 의료용 마약류 투약여부 교차 점검체계 구축					법무·식약

과제명 (90개)	* 기본계획 189개 과제	추진 일정				소관 부처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3) 모든 마약류 사범 대상 '자기주도 재활훈련 프로그램' 도입						법무
4) 외국인 마약류 사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운영						법무
5) 재범예방 교육 이수명령 병과 대상 확대						식약·법무
6) 첨단장비 도입을 통한 수용동 내 재활 훈련 실시						법무

3. 외국인^{4개}

1) 입국 전 사증심사 시 서류 위변조 검증 강화 지속						법무
2) 외국인 유학생 대상 온라인 교육과정 신설						법무
3) 외국인 유학생 대상 다국어 홍보자료 각 대학 배포안내						교육
4) 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기관 건강검진 시 마약류 검사 실시						노동

4. 군^{5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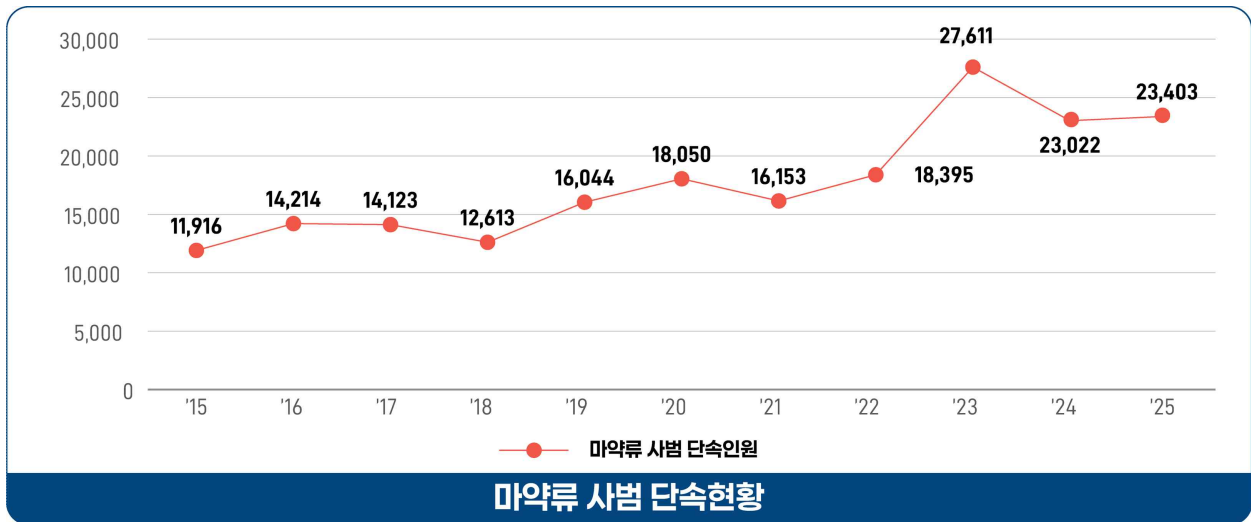
1) 입영·현역 군인 대상 마약류 검사 실시, 조기 발견						병무
2) 마약류 이력 장병을 도움·배려 장병으로 선정해 사후관리						국방
3) 마약류 특별신고 기간 운영, 신고자 보상금 지급						국방
4) 마약류 반입물품 검사 및 탐지 강화						국방
5) 마약류 예방교육 실시 및 군 마약류 퇴치 홍보 주간 운영						국방

1 마약류 범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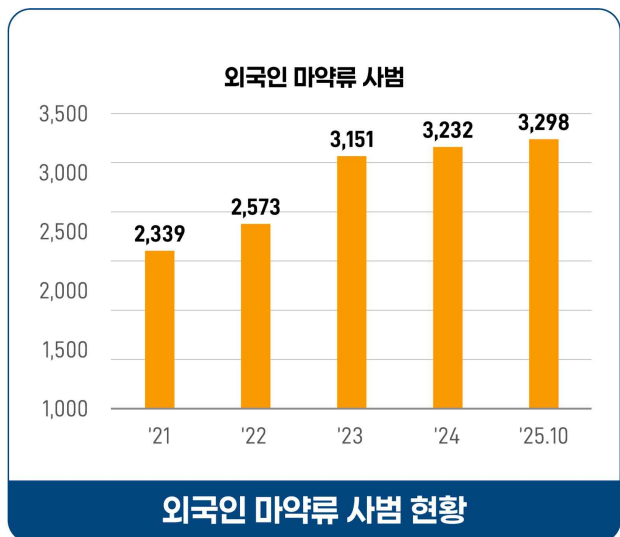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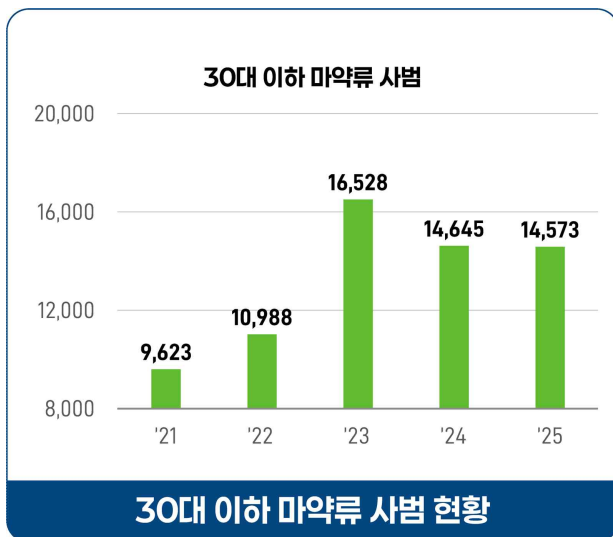
□ '25년 국내 마약류 사범 23,403명 (공급* 6,777명, 투약 8,789명)

* 밀조, 밀수, 밀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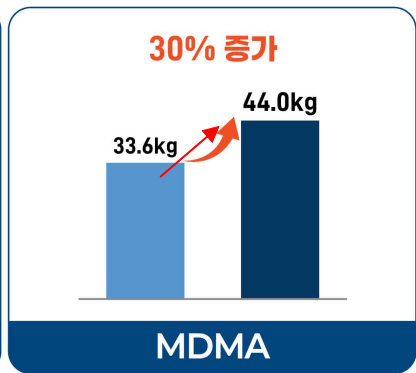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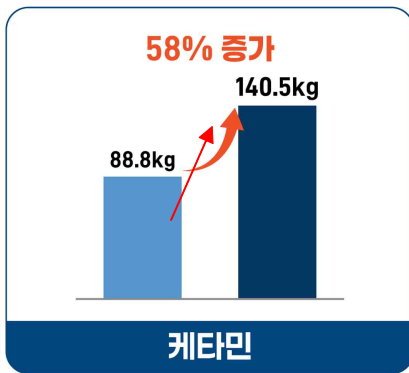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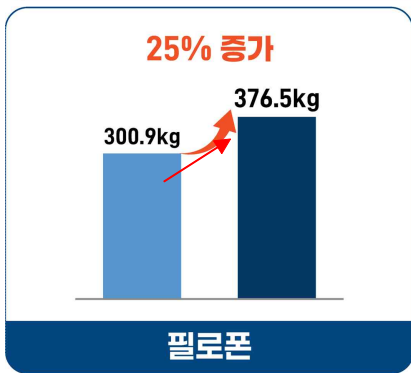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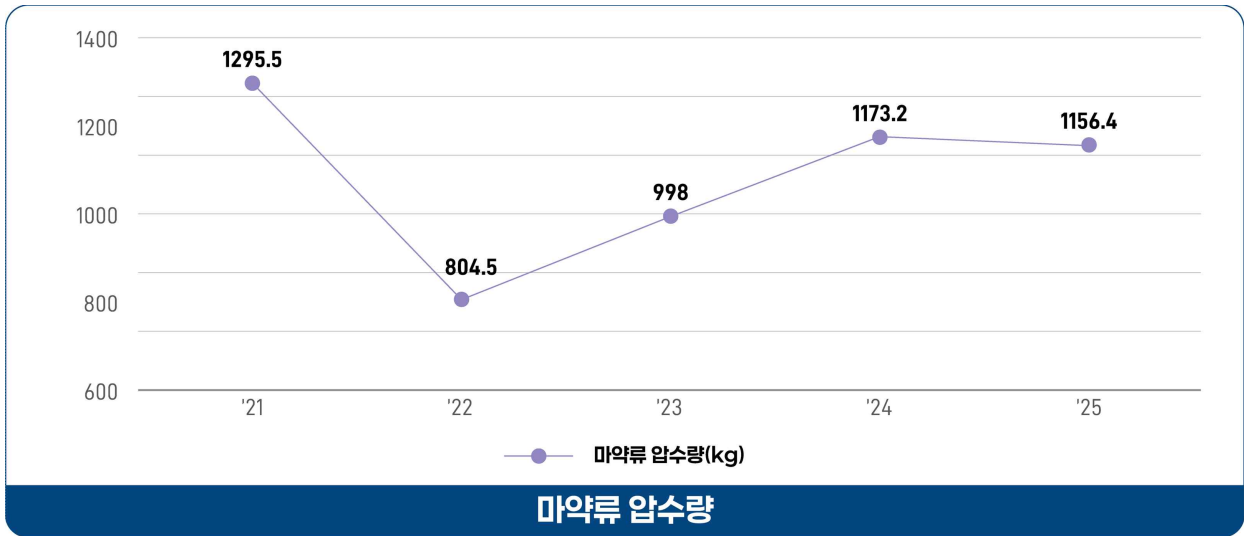
- (유형별) 향정 19,212명, 대마 2,459명, 마약 1,732명, '15년 대비 마약/대마는 82% 증가, 향정이 99% 증가하여 관리 필요



- (연령별) 10-30대 마약류 사범이 전체 마약류 사범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2.3%를 차지, 청년세대의 마약류 노출에 대한 관심 요구
- (외국인 사범)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최근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중으로, 베트남·태국·중국 순으로 분포



- 마약류 압수량은 '21년 단발성 실적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증가 중
 - (종류별) 필로폰·케타민·MDMA 등 향정신성의약품(소위 클럽용 마약) 밀반입 및 유통 비율 급격히 증가



- (유입경로별) 대부분의 마약류가 해외에서 밀반입되며, 주요 마약류 (필로폰·엑스터시·케타민·대마) 밀수국은 미국·태국·베트남 등에서 밀수입
 - 주요 마약류 밀수방법은 여행자 직접 운송(48%), 항공특송(25%), 국제특급우편(24%) 순으로 집계



- 의료용 마약류는 꾸준히 연간 약 2,000만명 환자가 처방받으며, 오남용환자 수도 '23년 이후 연간 약 1만명 유지
 - '25년에는 '24년에 비해 오남용 환자수가 증가하였고, 일시적인 증가로 추정되나 지속적인 리스크 관리 필요
 - (종류별) 의료용 마약류 처방은 마취제, 최면진정제, 항불안제 순이며(환자수 기준), 최근 사회적으로는 식욕억제제, ADHD 치료제 오남용 문제 대두(환각목적 외 사유(다이어트·공부)로 오남용)

구분	'22	'23	'24	'25
처방 환자수	19,460,035	19,906,120	20,009,768	20,195,909
오남용 환자수	12,324	9,952	10,221	10,159
오남용 처방률	0.06%	0.05%	0.05%	0.05%

- **【국제동향】**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주요 마약류(대마·코카인·메스암페타민·오피오이드 계열)의 생산·유통(밀매·밀수 등)·투약 증가
 - ※ (국제동향 자료출처)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 세계 마약류 동향 보고서
 - (종류별) 우리나라와 달리 코카인 유통문제가 국제적으로 두드러지며, 니타젠(펜타닐 10배) 등의 신종마약류 또한 문제로 지적
 - 우리나라로 주요 유통되는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의 상당수는 동남아(미얀마 골든 트라이앵글 등)에서 생산되며 10년 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 추정
 - (투약자) 전 세계 투약자는 3.16억명으로 추정(전세계 인구의 6%)되며 10년 전에 비해 28% 증가(인구수대비사용비율은 15% 증가(5.2%→6%))
 - 전세계적으로 마약류 투약자의 상당수가 범죄, HIV 감염, 자해 등 노출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도 2차 범죄 및 질병감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 필요
 - (범죄수법) 다크넷 사이트를 통해 마약류의 광고·판매가 이루어지며, 우리나라의 경우 메신저(텔레그램)를 통한 거래 실시
 - 전세계·우리나라 모두 가상자산을 통한 마약거래가 보편화 된 이후 마약류 거래량 급증했으며, 미 마약단속국(DEA), 인터폴, 우리나라 경찰청 모두 가상자산 전담 대응팀을 신설하여 대응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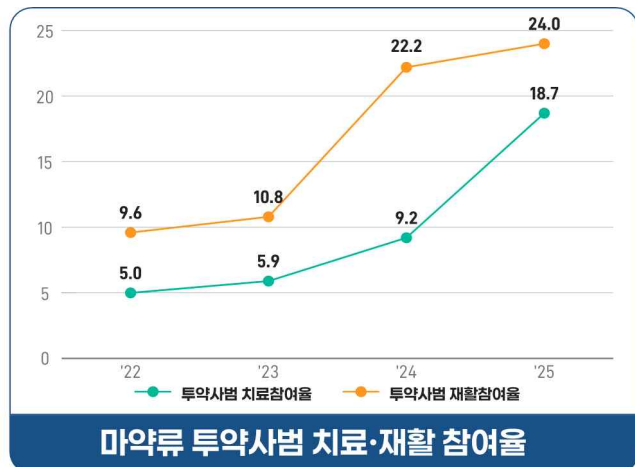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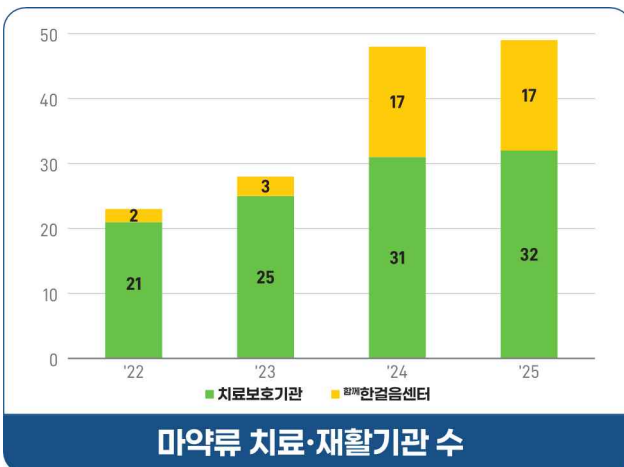
2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현황

●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비교

구분	치료(보건복지부)	사회재활(식품의약품안전처)
목표	중독자의 중독 중등도 경감	중독자의 사회복귀 및 재사용 예방
대상	중증의 마약류 중독자	모든 유형(의료용 마약류 포함)의 마약류 중독자
주요내용	병원에서 의사가 행하는 의료적 처치	심리 및 중독상담, 개인별 사례관리 *중독수준 평가하여 필요시 치료 연계
지원기관	기존 병원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	별도 중독재활센터(함께한걸음센터) 설치

□ 치료보호기관(복지부) 수와 중독재활센터(함께한걸음센터)(식약처) 수는 지속 증가

- 기관 수 증가에 따라 치료참여율(5%→18.7%)과 재활참여율(9.6%→24%) 모두 2배 이상 증가 * 참여율: 참여자/마약류투약사범
- 다만, 총 치료·재활 참여율이 42.7%로 전체 투약사범의 과반을 넘지 않아 지속적인 인프라 확대 및 서비스 제공 필요



3 마약류 투약사범 관리 제도

- (조건부 기소유예) 교육·보호관찰·치료재활 연계 등을 조건으로 검찰 처분에 따른 조건부 기소유예 실시(법원 재판단계 이전)
- 검찰 주관으로 식약처(마약퇴치운동본부), 법무부(보호관찰소), 복지부(치료보호소)와 협업 진행 중

- (교육조건부) 보호관찰을 병행하지 않고, **4일(28시간) 교육 수강**
- (선도조건부) 보호관찰을 병행하고, **4일(28시간) 교육 수강**
- (사범-치료-재활 연계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전 식약처가 개별 중독 수준평가,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 제안 후 검찰의 조건부 기소유예

- (집행유예) 법원은 마약류 투약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을 병과
 - 집행유예자의 관리는 법무부 보호관찰소 주관으로 교육은 식약처 (마퇴본부)에서 실시
- (징역형) 법원은 마약류 투약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재화에 필요한 교육의 이수명령을 병과
 - 수감자의 관리 및 교육은 법무부 교정본부 주관으로 실시

※ 운영현황(통계)

단계	재할 체계		주요 내용	'25년 실적	주관	협력
검찰 단계	조건부 기소유예	교육	▶ 4일(28시간) 교육 ▶ 보호관찰 병행하지 않음.	967명 *24년 1,385명	식약처 (마퇴본부)	-
		선도	▶ 4일(28시간) 교육 ▶ 보호관찰 병행		법무부 (보호관찰소)	식약처 (마퇴본부)
		사법-치료-재할 연계 참여	▶ 맞춤형 치료·재할 프로그램 제안 후 이수 조건 ▶ 보호관찰 병행	192명 *24년 160명	식약처 (마퇴본부)	법무부 (보호관찰소) 복지부 (치료보호기관)

* 교육의뢰(검찰), 약물검사 등 대상자 관리(보호관찰소), 교육시행(마퇴본부)

단계	재할 체계		주요 내용	'25년 실적	주관	협력
법원 단계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수강명령	▶ 집행유예 선고 시 '수강명령' 필수 ▶ 보호관찰 병행	3,588명 *24년 3,818명	법무부 (보호관찰소)	식약처 (마퇴본부)
	징역형	이수명령	▶ 벌금형 이상 선고*, 약식명령 고지 시 '이수명령' 필수 * 징역형의 경우 교정 시설내에서 이행	1,453명 *24년 1,162명	법무부 (교도소)	식약처 (마퇴본부)

* 규정상에는 벌금형에도 이수명령 부과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비수감자와 수감자를 구분하여 수강명령(비수감자), 이수명령(수감자) 부과

4 마약류 예방·교육 현황

- (마약류 예방홍보) 젊은층의 흥미를 높이고, 광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 시도 중 ⇒ 노출 수 증대 유도
 - 현재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생성형 AI를 활용, 브이로그 소재 등을 가미한 쇼츠를 제작하여 온라인에 송출
 - 기존 방송 및 SNS 뿐만 아니라 최근 떠오르는 OTT와 방송 중간 광고를 활용하여 홍보효과 극대화 *약 7,500만회 조회 추정
 - 오프라인에서도 지하철·시내버스·미디어보드·가정통신문·학원·약국 등 옥외광고와 포스터 배포 *24시간 마약류 상담, ADHD 치료제 오남용 등
- (마약류 예방교육) 2024년부터 식약처의 노력으로 마약류 교육 수강자 수 급속도로 증가 *마약퇴치운동본부(함께한걸음센터)에서 교육 병행

※ 운영현황(통계)

구분	세부내역	2022		2023		2024		2025	
		회	명	회	명	회	명	회	명
합계		5,543	365,099	8,748	693,068	32,205	2,285,391	39,356	2,293,398
오프라인									
유아, 학교 내 청소년	유아	398	11,708	367	8,899	1,572	62,588	1,574	47,928
	초등	2,612	106,691	4,229	186,330	16,153	502,122	21,759	591,851
	중등	718	119,673	1,407	207,166	4,795	376,430	5,807	448,918
	고등	298	78,166	805	172,645	2,594	283,527	2,798	317,449
	소계	4,026	316,238	6,808	575,040	25,114	1,224,667	31,938	1,406,146
취약계층	법적 처벌								
	성인(구치소, 교도소)	-	440	-	1,285	-	2,229	-	4,931
	청소년(꿈키움센터)	148	1,311	299	4,226	564	10,139	543	9,915
	계	148	1,751	299	5,511	564	12,368	543	14,846
	기타 취약계층	541	7,272	501	8,761	1,048	36,944	979	39,229
	소계	689	9,023	800	14,272	1,612	49,312	1,522	54,075
성인	일반인	218	9,518	407	30,069	525	158,871	323	113,146
	군인	-	-	-	-	601	62,184	1,084	101,103
	학부모	15	291	60	5,184	16	2,190	9	154
	대학생	350	1,348	303	8,559	2,131	18,783	456	17,227
	소계	583	11,157	770	43,812	3,273	242,028	1,872	231,630
전문 인력	강사교육	21	465	25	322	250	10,192	65	13,364
	교사교육	24	2,721	141	9,619	282	31,196	146	15,402
	관련기관 종사자	-	-	-	-	237	40,661	136	36,865
	소계	45	3,186	166	9,941	769	82,049	347	65,631
기타 프로그램	마그미캠프	21	4,956	22	2,321	139	20,654	0	0
	또래상담자	79	543	23	251	134	1,354	69	1,052
	교육극	100	13,986	159	25,398	1,013	206,249	636	120,665
	체험형 인식개선 프로그램	-	-	-	-	151	137,730	0	0
	메타버스VR	-	-	-	-	-	-	1,856	49,430
	참여형 부스 프로그램	-	-	-	-	-	-	1,058	151,630
	체험형 미술활동	-	-	-	-	-	-	58	960
	소계	200	19,485	204	27,970	1,437	365,987	3,677	323,737
중계	5,543	359,089	8,748	671,035	32,205	1,964,043	39,356	2,081,219	
온라인 (비대면)									
온라인사이트(nodrugzone.mfds.go.kr, edu.drugfree.or.kr)	-	6,010	-	22,033	-	321,348	-	212,179	

1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기관 현황

- (치료보호기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별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기관으로, 보건복지부가 총 32개소를 지정·운영 중

<치료보호기관 현황(32개소, '25년 말 기준)>

지역	구분	병원명	지정 병상 수(개)	대표번호
서울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10	02-300-8114
	광진구	* 국립정신건강센터	2	02-2204-0114
부산	연제구	부산의료원	2	051-507-3000
	사상구	부산시립정신병원	8	051-310-7710
대구	서구	대구의료원	2	053-560-7575
	동구	* 대동병원	25	053-663-1008
인천	동구	인천광역시의료원	2	032-580-6000
	서구	* 인천참사랑병원	50	032-571-9111
광주	광산구	광주시립정신병원	5	062-949-5200
	서구	다사랑병원	5	062-380-3800
	북구	천주의성요한병원	2	062-510-3114
대전	중구	* 참다남병원	4	042-222-0122
	서구	마인드병원	2	042-528-6550
울산	남구	마더스병원	10	052-270-7000
경기	의정부시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5	031-828-5000
	용인시	용인정신병원	10	031-288-0114
	용인시	* 경기도립정신병원	10	031-330-6200
	의왕시	계요병원	10	031-455-3333
	수원시	아주편한병원	2	031-269-5665
	이천시	이천소망병원	5	031-637-7400
강원	원주시	*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2	033-741-0114
	춘천시	국립춘천병원	10	033-260-3000
충북	청주시	주사랑병원	2	043-286-0692
충남	공주시	국립공주병원	2	041-850-5700
전북	익산시	* 원광대학교병원	2	1577-3773
	김제시	신세계병원	32	063-545-8700
	완주군	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	4	063-240-2100
전남	나주시	국립나주병원	10	061-330-4114
경북	포항시	포항의료원	3	054-247-0551
경남	창녕군	* 국립부곡병원	90	055-536-6440
	양산시	양산병원	2	055-379-0202
제주	제주시	* 연강참병원	2	064-759-9641
합계		32개 의료기관	332	-

* 권역 치료보호기관

② 마약류 중독자 재활 기관 현황

- (함께 한걸음센터) 식약처는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함께 마약류로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는 국민들에게 마약류 오·남용 상담과 중독 관련 재활 상담 등을 제공, 전국 17개소 운영 중



참고

'25년 시행계획 주요과제(85개) 추진 상황

연번	과제명	추진 상황
1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실시 (경찰청, 대검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완료
2	유입 취약시기 기관별 집중 단속활동 전개 (경찰청, 대검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완료
3	검찰-세관 합동분석팀 운영을 통한 상시 정보연계 (대검찰청, 관세청)	정상 추진
4	우편집중국(동서울) 내 마약류 검색시스템 구축·운영 (대검찰청, 관세청, 우정사업본부)	정상 추진
5	휴대용 모바일 포렌식 장비 도입 (대검찰청)	완료
6	첨단 증거분석 프로그램 도입 (대검찰청)	완료
7	약물운전(운항)자에 대한 마약류 검사 근거규정 마련 (경찰청, 해양경찰청)	정상 추진
8	소변 유효성 검사법 개발·활용 (대검찰청)	정상 추진
9	온라인 수사팀 신설·운영 (경찰청)	완료
10	위장수사 제도 마련 (경찰청, 대검찰청)	이행 중
11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대검찰청, 식약처)	정상 추진
12	가상자산 전문가 분석 지원을 통한 수사역량 강화 (경찰청)	완료
13	가상자산 추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 실시 (대검찰청)	완료
14	마약류 범죄 이용계좌 지급정지 (대검찰청)	이행 중
15	마약류 범죄 관련 보상금 지급 확대 (대검찰청)	이행 중
16	첨단 통관감시 장비 확대 (관세청)	완료
17	대형화물 검색을 위한 컨테이너 검사센터 구축 (관세청)	완료 예정
18	국제우편물에 대한 AI 기술 도입·활용 (관세청)	정상 추진
19	수중드론 등을 통한 선저 검색 확대 (해양경찰청)	정상 추진
20	주요 마약류 유입국에 검찰 마약수사관 파견 (대검찰청)	정상 추진
21	인터폴 'MAYAG' 합동 공조작전 등 추진 (경찰청)	정상 추진
22	국가간 공동 대응을 위한 국제회의체 역할 확대 (대검찰청, 해양경찰청)	완료
23	오리온 캠페인 현지 훈련 참여 (해양경찰청)	정상 추진
24	과거 투약이력 확인 대상 성분 확대 (식약처)	정상 추진
25	의사 셀프처방 금지 대상 확대 (식약처)	정상 추진
26	식약역제에 대한 제조·수입량 배정 (식약처)	정상 추진
27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투약이력 간편 확인 (식약처)	완료
28	마약청정 대한민국 내 의료용 마약류 정보센터 개설 (식약처)	완료
29	전국 함께한걸음센터에서 방문상담 실시 (식약처)	정상 추진
30	24시간 전화상담을 통해 집중관리 대상 발굴·연계 (식약처)	정상 추진
31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3개소 확대 (복지부)	완료
32	숙식형 한걸음센터 설치에 대한 타당성 연구 실시 (식약처)	완료
33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 기준 완화 (복지부)	완료
34	치료보호 종료 이후 재활기관으로 연계 강화 (복지부)	완료
35	재활기관 인프라 효율적으로 연계 (식약처, 복지부)	정상 추진
36	사회재활 이후 주기적 사후관리 위한 매뉴얼 마련 (식약처)	정상 추진
37	수가 시범사업 계획안 마련 (복지부)	정상 추진
38	정신의료기관 응급병상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복지부)	정상 추진
39	가족기능 회복지원 프로그램 전국 확대 (식약처)	정상 추진
40	예방·재활 전문인력 양성 확대 (식약처)	정상 추진
41	투약사범에 대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적용 확대 (대검찰청, 식약처, 법무부, 복지부)	정상 추진

연번	과제명	추진 상황
42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약물검사 및 심리상담 확대 (법무부)	정상 추진
43	추가치료 필요한 출소자에 대한 치료보호기관 연계 (복지부, 법무부)	완료
44	전담교정시설 출소 이후 함께한걸음센터 연계 강화 (법무부)	정상 추진
45	대학교 내 마약류 예방 서포터즈 운영 확대 (식약처)	정상 추진
46	지역 대표 축제·행사 등 계기시 대국민 캠페인 진행 (식약처)	정상 추진
47	대국민 캠페인 영상 제작 (문체부)	정상 추진
48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 확대 (식약처)	정상 추진
49	교원용 교육 표준지도서 개발 보급 및 교원연수 추진 (교육부)	정상 추진
50	교육대상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식약처)	정상 추진
51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식약처)	정상 추진
52	마약류 하수역학 조사방식 개선 (식약처)	완료
53	국내 처벌규정 정합성 조사·정비 (식약처)	정상 추진
54	암페타민 계열에 대한 신속 검사키트 개발 (식약처)	완료
55	마약류대책협의회에 부처 및 지자체 참석 확대 (식약처, 국조실)	정상 추진
56	예방·홍보 및 사회재활 관련 표준조례 개정(안) 마련 (식약처, 국조실)	정상 추진
57	국제마약퇴치 지원사업 실시 (몽골·키르기스스탄) (경찰청, 대검찰청)	정상 추진
58	국제기구 등과 정보협력을 통한 국제동향 상시 파악 (대검찰청, 관세청, 식약처, 국과수)	정상 추진
59	국내 유입 우려 성분에 대한 표준품 선제 확보 (식약처, 국과수)	완료
60	임시마약류 구분 및 지정기한 폐지 (식약처)	정상 추진
61	200여종 마약류 동시 분석기술 개발 (식약처)	정상 추진
62	마약류 정보 빅데이터 플랫폼에 AI 기술 접목, 신종 마약류 탐색·예측에 활용(국과수)	정상 추진
63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핸드캐리 수하물 및 신변 전수검사 실시 (관세청)	정상 추진
64	국내 마약제조 사범에 대한 단속 강화 (대검찰청)	정상 추진
65	수요 예측량 사전에 산출, 제조·수입 배정량 통제 (식약처)	정상 추진
66	오남용 우려 기관에 대한 합동단속 실시 (경찰청, 대검찰청, 식약처)	완료
67	미성년자 의료용 마약류 처방기준 마련 (식약처)	정상 추진
68	불법마약류(합성마약류 포함)에 대한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개발 (식약처)	완료
69	합성마약 위험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식약처, 대검찰청)	정상 추진
70	(청년) 온라인 플랫폼 내 불법·유해정보 상시 점검·대응 (식약처, 대검찰청, 성평등가족부)	정상 추진
71	(청년) 찾아가는 마약류 예방·중독상담 실시 (식약처)	정상 추진
72	(청년) 청소년 재활프로그램 전국 확대 운영 (식약처)	정상 추진
73	(청년) 치료·재활 이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연계·관리 (식약처, 성평등가족부)	정상 추진
74	(청년) 청소년용 VR 콘텐츠 개발·활용 (식약처)	완료
75	(청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마약류 예방교육 (성평등가족부)	정상 추진
76	(청년) 대학생 마약류 예방교육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식약처, 교육부)	완료
77	(청년) 집단연수 행사시 마약류 중독예방 교육 권고 (교육부)	완료
78	(외국인) 사증심사 필수 제출서류에 대한 위변조 검증 강화 (법무부)	정상 추진
79	(외국인) 외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입국금지기간 상향 (법무부)	완료
80	(외국인) 사증 발급 시 마약 예방교육 이수 권고 (법무부)	완료
81	(외국인) 다국어 안내자료 제작·배포 (식약처, 교육부, 법무부, 노동부)	완료
82	(외국인) 유학생 조기적응 프로그램에 예방교육 신설 (법무부)	정상 추진
83	(수용자) 모든 수용자 대상 물질중독 예방교육 실시 (법무부)	완료
84	(군인) 병역·입영판정 검사 대상자 마약류 검사 (병무청)	정상 추진
85	(군인) 임관 및 장기복무 지원 간부 대상 마약류 검사 실시 (국방부)	정상 추진